

제3의 근대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접목¹⁾

전성우 /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동북아: 역사의 아이러니

한 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를 살펴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서구에서 '고안되고' 거기서 꽃을 피운 두 가지 근대화 전략 즉,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전략과 사회주의적-인민민주주의적 근대화 전략이 아직도 서로 맞닥들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지역이 바로 서구의 가장 반대편에 놓여 있는 극동 내지 동북아시아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과 대립이 가장 첨예한 곳이 바로 이 극동의 끄트머리인 한반도라는 사실은 더더욱 아이러니이다. 거기에 더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양 체제는 각각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하다. 자본주의가 가장 놀라운 성공을 거둔 곳은 일본이고 그에 못지 않은 경이로운 발전의 예가 한국이며, 중국의 사회주의는 지금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자리는 이미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마도 사회주의체제의 전형적인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년간의 상황을 보면 이런 평가에 이의를 달기가 힘들다. 그러나 한 발작 물러서서 북한을 세계 사회주의체제가 최근에 겪은 운명에 대비시켜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당히 '살아남아 있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

1) 이 글의 성격과 한계를 아래와 같이 미리 밝혀둔다. 필자는 여기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치적 질서와 남북한 관계에 대한 현실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한·미·일·중간의 새로운 관계 및 이와 연관된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과 같은 현실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는 사계의 권위자들이 이미 다양하고 탁월한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비전문가인 필자로서는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 글에서 시도되는 것은 오히려 필자가 평소 신세기에 동북아시아가 추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한 당위적 논의이며, 따라서 이 글은 상당히 현학적 ('공상적'이라고 불려도 좋다) 성격의 글임을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한다.

안 존속할 것이라는 사실은 북한을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예로 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이러니의 세 가지 해석법

이 아이러니를 해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 첫번째는 - 그리고 이것이 주류담론이다 -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전략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즉, 사회주의적 모델은 그 자체로서 폐기 처분의 대상이며, 동북아에 아직 남아있는 두 체제 역시 단지 그 폐기가 잠시 '유예'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집약하고 있는 표어가 이른바 '역사의 종언론'이다. 즉,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이제 그 종착점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해석들은 그 이론적 정교성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막강한 현실적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른바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80년대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아이러니를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동구사회주의체제의 붕괴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전략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둘째, 동북아의 두 사회주의 국가는 폐기가 유예된,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마지막 걸림돌이 아니라, 근대가 발명한 또 하나의 발전 전략인 사회주의가 아직도 충분히 실험의 가치가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를 제3의 근대성의 가능성이 꿩고 있는 용광로로 보는 시각이다.

이래 지구의 거의 모든 구석을 정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구석이치, '모든' 구석은 아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성공적으로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바로 이 체제 자신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의 두 사회주의 국가는 폐기가 유예된,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마지막 걸림돌이 아니라, 근대가 발명한 또 하나의 발전 전략인 사회주의가 아직도 충분히 실험의 가치가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심지어 북한마저도) 내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국의 경우) 개방을 통해 세계화의 조건에 일정 부분 적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체제 이념과 체제 원리의 사회적 정당성에 관한 원칙적으로 흔들림이 없다.

세번째는 - 그리고 이것이 필자의 입장

두 가지 체제와 이념이 상생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제1의 근대성과 제2의 근대성의 종합을 통한 제3의 근대성을 창출할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지닌 곳이다. 기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명적 위기²⁾의 창조적 극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은 동질적 단일 문화의 토양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의 융합과 결합이 가능한 곳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지역이 동북아시아이다.

이다 - 동아시아를 제3의 근대성의 가능성이 뚫고 있는 용광로로 보는 시각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제1의 근대성은 그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또는 바로 이 성공때문에 자기 파괴의 가능성을 안고 있고, 사회주의적 제2의 근대성은 그 엄청난 실패 (스탈린식 전체주의화)에도 불구하고, 또한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실패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구 실험의 실패 이전 사회주의 체제는 냉전적 지배 헤게모니라는 굴레를 쓰고 있었지만, 바로 이 실패와 냉전의 종식이 비로소 사회주의를 제국주의적 헤게모니 전략이라는 족쇄에서 해방시켜주었고, 그 결과 사회주의는 비로소 자본주의와 대등하게 자발적으로 선택 혹은 포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대화 전략으로서 검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못지 않

은 인류의 위대한 이념적 발명품이다. 이것은 가령 사회주의를 직접 살아본 구 동독 주민들이 통일 이후 사회주의적 이념과 제도 자체에 대해 가진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더 나아가 필자는 자본주의가 우리 동북아에서 성공한 것이 동양적 문화의 특정 속성들때문임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사고 양식 역시 사실 우리 동양인이 고안했음직한 사상임에 주목한다. 실제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사회주의적으로' 살고 있다. 가령 가족-연줄-회사 조직의 강한 집단주의적-공동체주의적 성격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은 심지어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우리 동양의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 전통들, 가령 중앙 집권과 공동체주의와 가부장주의 등에 강한 친화성을 가진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체제와 이념이 상생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는 필자가 보기에 제1의 근대성과 제2의 근대성의 종합을 통한 제3의 근대성을 창출할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지닌 곳이다.

기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든 문명적 위기²⁾의 창조적 극복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은 동질적 단일 문화의 토양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의 융합과 결합이 가능한

곳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지역이 동북아시아이다. 서구 문명은 그동안 너무나 동질화·단선화되어버린 반면, 여기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동서양의 지극히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적 전통들이 문화적 그리고 체제적 용광로 속에 넣어져서 융합되고 있다.

서두에 언급한 역사적 아이러니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조망하는 우리의 시각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첫번째와 두번째 해석을 택할 경우, 우리는 이례적인 사회주의체제의 폐기 가능성만을 항상 엿보는 갈등과 위협의 시각을 의식·무의식 중에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번째 해석을 취할 경우, 우리는 제3의 근대성을 내포할 수도 있을 문명 모델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지향을 '체제 학습'이라는 개

동북아의 역사적 아이러니의 해석들 가운데 택하는 해석에 따라 21세기 동북아를 조망하는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세번째 해석을 취할 경우, 우리는 제3의 근대성을 내포할 수도 있을 문명 모델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 지향을 '체제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묶고자 한다. 체제 학습은 이해 관계에 바탕한 단순한 소극적 상호체제 협력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학습'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지금 지구 상에서 단순히 실천의 차원에서 이런 '체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동북아시아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한반도이다.

념으로 묶고자 한다. 체제 학습은 이해 관계에 바탕한 단순한 소극적 상호체제 협력을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학습'의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단순히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그러나 언젠가는 폐기되어야 할 체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울 수 있는 체제로 인정하고 스스로를 개방해야 한다. 지금 지구 상에서 단순히 이념이나 이론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천의 차원에서 이런 '체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동북아시아이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한반도이다. 필자는 아래에서 이러한 체제 학습적 모델에 대한 몇가지 단상들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관계를 간략히 조망하고자 한다. 물론 이 논의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하며, 아래에서 제시할 네 가지 주제는 각각 매우 복잡한 이론적·실천

2) 현재의 지구촌 문명은 분명히 여러 면 - 환경, 빈부 격차, 윤리적 파탄 등 - 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제3의 국가 모델의 추구 방향은 우리의 의식 속에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내성화되어 있는 '국가 의존적' 성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국가 포기'가 아니라 '국가 활용적' 성향으로 전환시키는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자원은 바로 공동체적 사회 의식이다.

적 딜레마들을 안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의 의도는 단지 제3의 근대성이라는 지향점 하에 어떻게 동양과 서양의 전통, 자본주의적 원리와 사회주의적 원리의 융합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동북아시아의 '체제 학습적' 모델에 대한 단상들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단상

발전 모델의 차원에서 현재 동북아시아와 서구, 세계화·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에 아마도 가장 첨예한 대립과 또한 딜레마를 낳고 있는 문제는 국가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서구 담론은 명백히 탈국가·탈규제, 심지어 국민 국가의 결정적 약화 내지 소멸이라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한 국가중심주의적(심지어 국가절대주의적) 전통을 가진 동북아시아 및 사회주의

체제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도전이다. 그러나 이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단순히 탈국가주의적 서구 담론의 수용이어서는 안되며, 체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제3의 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추구의 방향은 우리의 의식 속에 수천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내성화되어 있는 '국가 의존적' 성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국가 포기'가 아니라 '국가 활용적' 성향으로 전환시키는가라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자원은 바로 공동체적 사회 의식이다.

공동체주의

우리의 공동체주의는 분명히 지배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하고 따라서 합리적 개인주의에 의한 교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그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동북아시아가 가진 가장 귀중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자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공동체 의식은 한 번 상실하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재 서구의 상황이 증명해준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 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구에서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회복 운동이 일어나

고 있지만, 이미 원자적 개인주의의 세례를 철저히 받은 서구 문화에서는 이런 공동체 회복 운동은 가히 절망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우리는 합리적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떻게 상호 배타적이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를 탐색해야 한다. 이 문제는 물론 정치적·개인적 인권의 문제와 '사회적·공동체적' 인권 문제간의 조화의 문제로도 표현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복지 모델

모든 복지제도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체주의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동북아시아는 복지 국가의 건설에 필요한 매우 귀중한 이념적·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복지 국가 모델의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체제 학습의 과정을 통해 구축될 남북한 관계의 요체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변혁, 둘째는 남한의 자성적 근대화, 셋째는 하나의 새로운 통합 단위로서의 한국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 사회의 관계

위의 세 가지 관계 설정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형성될 국가와 시민 사회의 관계는 아마도 서구적 대립 모델과 동양적 (국가에 의한) 흡수·통제 모델을 벗어나는 제3의 유기적 모델이 될 것이다.

21세기 남북한 관계: 체제 학습을 통한 제2건국론

체제 학습의 과정을 통해 구축될 남북한 관계의 요체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변혁, 둘째는 남한의 자성적 근대화, 셋째는 하나의 새로운 통합 단위로서의 한국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체제 학습을 통한 이러한 제2건국³⁾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물론 무수히 많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몇가지만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북한 사회가 가진 소위 '유일무이한' 속성과 상황을 일방적으로 부정

3) 이것은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관제적 이른바 '제2건국운동'과는 전혀 무관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체제 학습을 통한 제2건국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첫째, 우리는 북한 사회가 가진 소위 '유일무이한' 속성과 상황을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율적 내부 개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냉철히 재평가해야 한다. 둘째, 물론 북한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한계 상황으로 인해 내부 개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자체 조달할 여력이 매우 부족하며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도움을 주면서도 즉각적 반대 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북한의 독자적 내부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우리 남한임은 자명하다.

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율적 내부 개혁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냉철히 재평가해야 한다. 가령 북한의 부정적 속성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폐쇄성 내지 세계체제로부터의 고립성은 오히려 이러한 내부 개혁을 위해서는 '유일무이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우리는 구동독 및 동구가 독자적인 변혁의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회들은 정치·경제적 세계체제 속으로 이미 거미줄같이 얽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개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소위 '개방화' 혹은 '세계화'라는 대 추세는 그 자체가 '善'이 아니라 한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엇보다도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는 가령 북한의 정책이 '개방' 쪽으로 나가면 무조건 옳은 것으로, 폐쇄의 경향을 보이면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짓는 도식적 사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만, 우리는 북한이 내부 모순과 체제 부작용을 해결

해나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물론 북한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한계 상황으로 인해 내부 개혁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자체 조달할 여력이 매우 부족하며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도움을 주면서도 즉각적 반대 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북한의 독자적 내부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우리 남한임은 자명하다. 우리만이 먼 장래를 바라보며, 아니 철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북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이다. 그리고 이 도움은 무조건 이라야 한다. 이 도움의 규모가 얼마가 되어야 할지 경제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원 방식이다. 우리는 통일 전까지 구서독이 구동독에게 했던 간

혈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즉흥적인 지원 방식(말하자면, 찢금 찢금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음을 알아야 한다. 오

히려 우리는 일시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 우리는 대북한 '마샬플랜'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의 충족이란 우리가 북한에게 자신들의 내부적인 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때 비로소 북한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 즉 북한의 내부 개혁을 우리가 지지한다는 데 대한 확신도, 체제 자신감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대규모의 인간 교류에 대해 그렇게 소심하고 '비인도주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 북한에게 자신감 형성의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 북한에게는 인도주의적 문제는 단순히 부차적이고 인간적인 문제가

셋째,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수 있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의 충족이란 우리가 북한에게 자신들의 내부적인 개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럴 때 비로소 북한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라 가장 체제 위협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협상이나 대화에서든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또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협상은 성공할 수가 없다

아마도 '공상적' 통일론이라고 불리기 마땅할 이 제2의 건국론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하고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외세'로 여기는 역설적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일천만 이산 가족의 한은 풀리겠지만 또 다시 2천만 해체 가족의 비극을 창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을 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힘의 논리에 바탕한 일방적 '체제 통일'이 오히려 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 통합'을 파괴하는 역설을 낳은 독일의 과오를 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통일 과정에서 어느 집단도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은 남북한이 제2의 건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2건국론의 대전제는 남북한의 자기 개혁 및 동반자적 체제 학습 의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러한 의지 형성의 대전제는 다시금 남한에 대한 신뢰이고, 우리의 북에 대한 신뢰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남북한 관계 발전의 종착점이 '너'만도 '나'만도 아닌 '우리'라는 제2의 '민주공동체적 사회 복지 국가'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제2의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개혁된 자본주의와 개혁된 사회주의를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상 어느 곳도 가지지 못한 새로운 문명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제2의 건국을 통해 활용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제2의 건국은 동시에 제3의 근대성을 창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근대성만도 사회주의적 근대성만도 아닌 제3의 근대성을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태어나는 '새나라'의 모습을 '민주공동체적 복지 국가'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2건국론의 대전제는 남북한의 자기 개혁 및 동반자적 체제 학습 의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이러한 의지 형성의 대전제는 다시금 남한에 대한 신뢰이고, 우리의 북에 대한 신뢰이다.

그리고 이 신뢰는 남북한 관계 발전의 종착점이 '너'만도 '나'만도 아닌 '우리'라는 제2의 '민주공동체적 사회 복지 국가'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제2의 '건국준비위원회'의 구성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은 '공상적' 통일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가능한 것마저도 이룩할 수 없다.' (막스 베버) **完**